



# 지방자치 정책 Brief

2022. 6.  
NO.146

## 지역균형발전 정책궤도(Policy trajectory) :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1,000조원 프로젝트

전성만 부연구위원  
황해동 부연구위원

### 주요내용

#### 지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반성

-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이래, 4차에 걸친 「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」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, 경제, 일자리 등 사회·경제환경을 반영한 지역 격차 심화
- 2004년 이래, 150조원 사업은 부처중심의 중앙의존적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어 지자체의 내생적 혁신역량 부족
- 저출산·고령화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, 향후 50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

#### 지역균형발전의 정책궤도 수립을 위한 방향성

-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할 때 중앙-지자체-국민 간의 공감대 확대 필요
-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는 지역주도의 문제해결형 정책혁신시스템 구축 필요
- 「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」 수립 및 이에 기초한 1,000조원의 안정적 자원 기반의 지역 균형사업 추진 필요

####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개혁방안

- (추진체제개편) 지역균형발전정책 기획-집행-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행·재정 권한 부여
- (균형발전정책 자원마련) 1,000조원(매년 20조원 50년)의 안정적 재원으로 사업 자율성 확보
- (균형발전정책 수행체계) 정책증거기반의 성과평가 및 연차보고서를 통한 정책환류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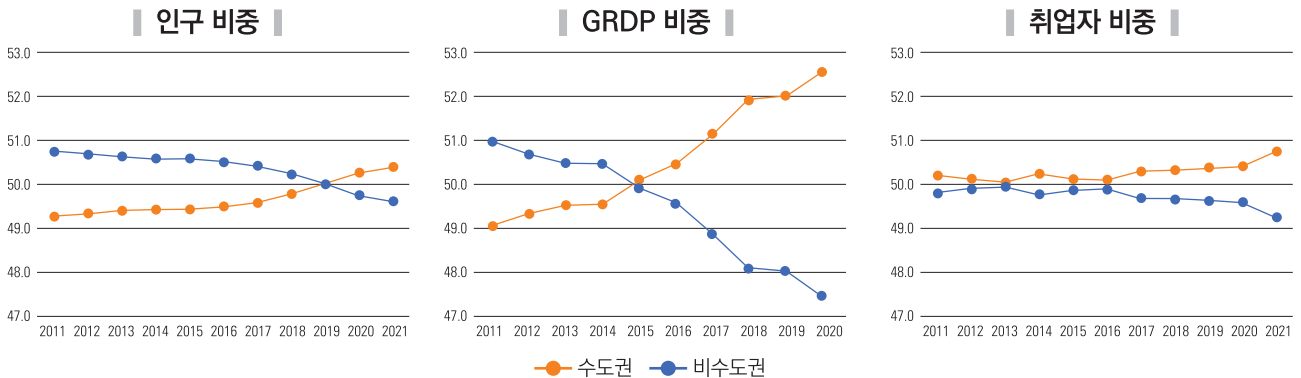
01

##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반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제도 수립 필요



### 반성 1)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저출산·고령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?

-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 이래, 4차에 걸친 「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」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
- 균형발전 핵심지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·GRDP·취업자 비중 등 격차 여전히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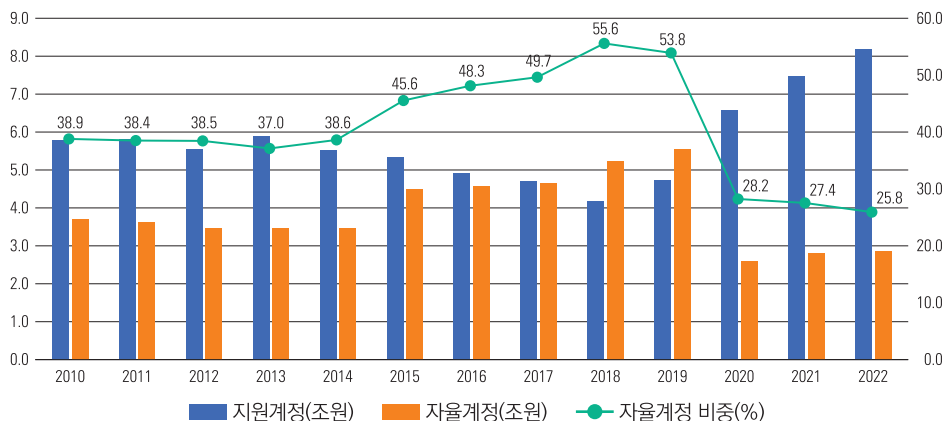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통계청자료,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(2022)



### 반성 2) 매년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 혁신역량은 강화되었는가?

- 매년 10조원 규모(2010~2021)의 국가지원에도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수도권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, 지역 일자리 감소, 수도권 청년인구 이동 등으로 지역자생력 (regional resilience) 결핍
-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개별 부처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특성으로 정부이념에 따라 사업 성격 및 지원규모의 변동이 큼



출처 : <https://www.nabis.go.kr/contentsDetailView.do?menucd=143&menuFlag=Y>



### 반성 3)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백년대계 계획은 존재하는가?

- 100년 후 현재 인구절반으로 줄어드는 저출산·고령화의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도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「지역균형발전50개년계획」 수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제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

## 02

#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제도 수립을 위한 방향성



###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시 중앙-지자체-국민 간의 공감대 확대 필요

-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 계획은 1) 100년 후 공간적 정의 실현이 무엇이고, 2) 현재 인구 절반이 줄어드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격은 무엇이며, 3) IT 및 4차혁명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의 방향성이 담긴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정책목표 및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한 공감대 형성 필요



###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는 지역주도의 문제해결형 정책혁신시스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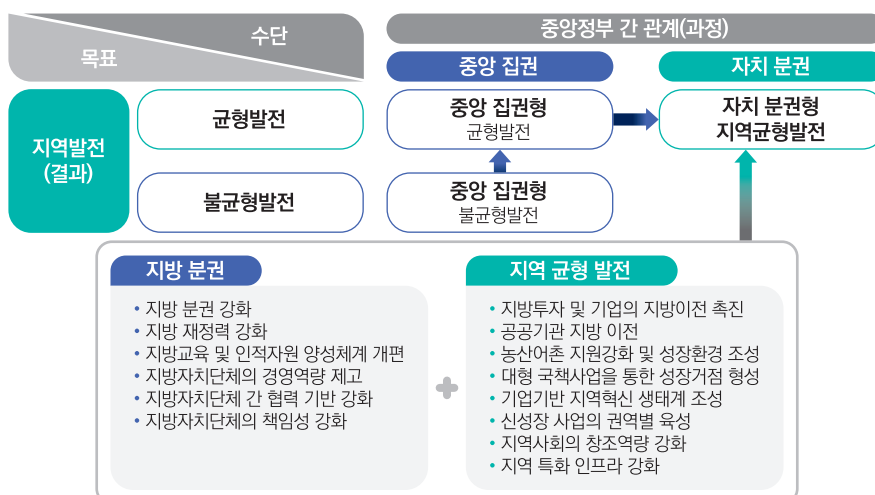
- 정책제도 수정의 접근방식은 현행 지역 간 불균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기능적 접근이 아닌, 전국 어디에도 균등하게 살 수 있는 균형발전의 본질적 기능 및 가치 추구의 규범적 접근 필요
- 과거 중앙부처의 기능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벗어나,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자기 책임성에 기반한 지역주도의 특성에 기반 지역혁신성장 기반 구축마련으로 출발



### 「지역균형발전50개년계획」에 기초한 1,000조원의 안정적 자원 기반의 지역균형사업 추진

- 부처 사업의 보조사업이 아닌, 지역균형발전 자체 재원으로 안정적 재원마련
- 지역특성을 발굴-장려-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참여와 민간협력을 통한 정책형 거버넌스 체제의 사업 발굴

#### 주민-민간-정부의 정책공감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1,000조원 프로젝트



03

##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개혁방안



### (추진체제개편) 지역균형발전정책 기획-집행-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행·재정 권한 부여

-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‘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의 한계
- 타 위원회의 유사·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해 저출산·고령화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획-집행-평가의 기능 및 행·재정 권한 부여



### (균형발전정책 재원마련) 1,000조원의 안정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재정 자율성 확보

- 매년 20조원 예산규모의 자체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계획, 부처 의존도와 정권별 정책변동 최소화
- 개별 부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이양사업을 발굴, 지역균형발전정책사업으로 집중

- 일본의 「마을·사람·일자리 창생본부(まち·ひと·しごと 創生本部)」
  - 내각부 소속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자체 20조원(2조엔) 내외의 재원을 통해, “인구”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추진
- 프랑스의 국토연대청(Agence nationale de la cohesion des territoires : ANCT)
  - 특수공법인(établissement public)으로 재정적 자율성, 이사회 구성(이사는 지자체 대표 중 선출) 및 일정한 범위의 자율 관리권(사장은 정부령에 의하여 임명되어 지휘권 가짐), 일반 공법인(국가, 지자체)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(국가균형발전위원회, 2020)



### (균형발전정책 수행체계) 정책증거기반의 성과평가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의 평가기반의 정책환류체계 구축

- 나눠주기식의 지역사업 배분이 아닌, 지역균형발전 수요 및 현황에 근거한 예산배분 및 집행체계를 구축하고, 투입된 재정지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성과평가체제 수립

#### 참고문헌

국가균형발전위원회(2020) 균형발전정책과 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연구.

국가균형발전위원회(2022) 국가균형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.

#### 내용문의

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(033-769-9879, sungmanjun@krila.re.kr)

지난호  
보기